

정부의 『FTA (자유무역협정) 이행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와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액 추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한·칠레 FTA 국회비준 통과를 위한 단기대책에만 치중한 법안이다.
- 「FTA이행지원기금」의 확보방안과 운영계획이 불투명하다.
- 일방적인 농업 축소만을 부채질하는 농업 포기 정책이다.
- 정부 입법절차를 통한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FTA 이행특별법」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3월 14일, 농림부 김영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림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FTA이행특별법은 예상 피해상황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파악해 제정하고,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FTA이행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FTA이행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법안을 준비중인 농림부는 법안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공개된 2월 19일 김동태 전임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3월 14일 김영진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FTA이행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어렵듯이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의 (표)와 같다.

정부가 준비중인 「FTA이행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법 제정 후 7년간 정부출연금·기부금·총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농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FTA이행지원농업위원회」를 구성하여 「FTA이행지원기금」의 운용 및 FTA 이행상황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3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FTA 대책에는

시설포도 폐원대상 농가 약 1천호에 대해 폐원지원·작목전환을 위해 3백평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2월 19일 기자회견 내용보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FTA이행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3월 14일 농림부 업무보고 직후부터 한농연 등 각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FTA이행특별법」과 「FTA지원대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자.

① 정부의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액 추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부는 작년 6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최종 무관세화년도(10년차) 예상 조수입 감소액을 86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연구결과 산출된 피해액 2,537억원에서 사과(874억원)·배(1,128억원)의 피해액을 뺀 시설포도·복숭아·자두·키위 등의 생과부문 피해액(535억원)에다 과실가공품 피해액(329억원)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다음 페이지의 상자 내용을 참조).

이는 작년 10월 24일 가서명 이후의 변화(사과·배·딸은 개방 유예)를 감안하지 않고 행정 통계수치만 가지고 계산한 단순 추정액이기 때문에 더

「FTA이행특별법」의 주요 내용

(2월 19일 김동태 전 장관 기자회견,
3월 14일 김영진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정리)

● 경영이양 등 지원

- 조기은퇴농가에 대한 경영이양 지원
- 작목전환에 따라 영농자금 지원 등

● 폐업지원

- 과수, 시설원에, 축산 등 생산설비 투자가 많은 품목의 재배·사육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시설포도 농가 4천호 중 폐원대상 농가(약 1천호)에 대해 300평당 1천만원(3년간 평균소득)을 지원함
- 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피해산업 긴급구제

- 급격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 농업경쟁력 강화

- 영농규모 확대, 경영·기술능력 향상,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 「FTA이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법 제정 후 7년간 8천억원 규모로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운영
- 「FTA이행지원기금」을 통해 폐원, 구조조정 등에 지원
- 재원은 정부출연금·기부금·수익금 등을 통해 마련
- 농업인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 및 지원상황을 수시 점검

● 「FTA이행지원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15인 이내)
- 지원기본방침, 협정이행상황점검, 폐업지원 세부기준 등에 대해 논의

* 최종 무관세화년도(10년차) 예상 조수입 감소액 864억원의 계산 근거 *

전체 과실류(사과·배를 포함한 사과부문) 피해 예상액(2,537억원)

- 사과(874억원) - 배(1,128억원) + 과실가공품 피해액(329억원) = 864억원

육 문제가 크다. FTA 발효 이후 발생할 각 품목들의 생산 및 수요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급격히 변화할 각종 경제변수와 생산·소비전망 속에서 세밀한 검토와 연구결과를 참고하지 않고, 단순 합산을 통해 계산된 피해 추정액을 근거로 마련된 「FTA이행특별법」과 정부의 FTA 대책은 기초부터 부실한 [면피성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② 한·칠레 FTA 국회비준 통과를 위한 단기대책에만 치중한 법안이다

정부의 법안 및 대책에는, 피해농가 보호를 위한 직불제 및 가격·소득지지정책, 농업재해대책 등 「농가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단기적인 폐원·구조조정·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만 평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 향후 FTA 추진시 산관학 연구 단계부터 농민대표·농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철저한 검증·검토를 보장하는 법적 조항도 없어 무책임한 [FTA 확대정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③ 「FTA이행지원기금」의 확보방안과 운영계획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1단계로 7년간 8천억원 규모로 [FTA 이행특별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재원 마련 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경제부처와 재계의 노골적인 반대 입장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 SK사태 등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불안하여, 기업 통상이익금 출연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분명하다. 기금운용수익금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도 이라크 전쟁 여파로 예상되는 증권시장 및 경제 여건 침체로 인해 매우 불투명하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시설포도 농가 1천여호의 폐원지원금(3백평당 1천만원) 333억원(평균 경영규모 약 1천평 가정)정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칠레 FTA로 인한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이 일단락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기금 마련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입장으로는 부담이 훨씬 적어지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경우, FTA 체결로 인한 농민 피해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우려가 크다.

④ 일방적인 농업 축소만을 부채질하는 농업 포기 정책이다

정부측의 「FTA이행특별법」과 「FTA대책」 등을 살펴보면, FTA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폐원 및 작목전환 등 구조조정 정책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자금 등의 지원정책이



▲ 정부는 한·칠레 FTA협상 당시부터 결사반대를 외쳐온 400만 농민의 목소리를 졸속으로 제정되는 FTA이행특별법으로 잠재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농업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하고 열악한 한국 과수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농업 축소 정책이다. 특히 농민들이 시설포도나 복숭아 등 칠레산 과실류와 직접 경쟁관계에 놓인 과실류 대신 개방예외품목인 사과·배 등으로 작목전환을 할 경우, 가격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들 품목 또한 피해를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실류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채소류와 여타 농축산물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전체 농축산물이 피해를 입고 전체 농업생산의 축소로 이어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⑤ 정부 입법절차를 통한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3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FTA이행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FTA 국회비준 동의안과 연계처리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만약 「FTA이행특별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된다면, 정부는 입법과정시 예상되는 각종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어 유리하다. 정부입법 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안 제정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검증



▲ 한농연은 허울뿐인 대책으로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온몸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절차를 생략하여 조속한 입법·처리가 가능하고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마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철저한 검증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에 있어서는 꼭 관찰시켜야 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내 경제·외교부처와 재계 등 한·칠레 FTA 추진 세력들은 막강한 언론 홍보활동과 대국민 선전활동을 통해 FTA의 불가피성 및 장점만을 집중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FTA 추진으로 인한 취약산업·계층의 피해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했다. 또한 그간 칠레와의 FTA 추진을 위한 협상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고 정부는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그 결과 한·칠레 FTA는 자국내 법령을 틀어대며 금융산업의 개방을 완전 제외시킨 칠레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칠레측 금융산업의 개방이 안 된다면 우리의 농업개방 또한 안 된다는 식의 '주고받기식 거래'마저 관찰시키지 못한 불평등 국제조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졸속적인 FTA 추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제동을 걸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과 같이, 국익 증진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 관료와 정치인·재계 인사들만이 아닌 4천 7백만 국민 모두의 공개 토론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FTA이행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비준 거부 의원 서명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도시지역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적극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5일 현재 총 11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마쳤으며, 270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수인 136명에는 19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3월 말부터 진행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때와 비교해 봐도 훨씬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농연은 허울뿐인 「FTA이행특별법」과 「FTA 이행지원기금」을 볼모로 400만 농민의 생존권과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온 몸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은 27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국 농업의 미래와 7천만 민족의 역사를 걸고 비장한 각오로 한·칠레 FTA의 비준 저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칠레 FTA의 비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2004년 총선을 통해 400만 농민과 4천 7백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한농연**